

강진 칠량농공단지 혈세 161억원 날릴 판

입주업체들 경영·관리 부실로 경매·휴폐업 된채 방치 정부 보조금 수억원씩 지원 받아 막대한 예산 낭비 논란 수산업 경험 없는 부적격 사업자도... 보조금 환수 목소리

강진군이 '수산식품특화단지'로 육성해 온 강진 칠량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관리·경영부실 등으로 부도를 맞고 장기간 휴·폐업으로 방치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입주 당시 수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 예산낭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부적격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입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도높은 보조금 환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 칠량농공단지에는 모두 13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5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8개 업체는 해양수산부의 민간자본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입지분양금 20%, 시설자금 60% 등 업체당 6억~9억 원까지 모두 60억6900만원을 지원받았다. 칠량농공단지 조성비용이 101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완공 예산만 총 161억6900만원이 투입된 셈이다.

하지만 농공단지 조성 당시 기대했던 지역경제활성화와 신규일자리 창출은커녕 일부 업체는 경영부실과 관리 감독 부재 등으로 경매·부도처리되거나 휴·폐업된 채 방치되고 있다. 현재 보조금 지원을 받은 8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경매가 진행됐고, 1개 업체는 경매절차를 밟고 있다. 또 1개 업체는 휴업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부도처리된 A업체의 경우 총사업비 15억원(자부담 6억원) 중 9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고, 강진군의 협조로 8억5000만원의 담보대출까지 받았다. 하지만 공장용지 구입비 2억원과 자부담 6억원 등을 모두 더해 대출금액이 더 많아 사실상 보조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특히 건설업자이기도 한 해당 부도업체 사업주는 공장 건축 당시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직접 공장까지 지은 것

으로 알려져 공사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의문이다. 다른 부도업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칠량농공단지내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소수 업체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경매·부도처리되거나 휴·폐업 상태”라며 “수산유통 사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보조금을 노리고 사업에 나선 것이 화근”이라고 주장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부적격 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산업을 주업종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일부는 건설과 도자기 업체로 수산업 관련 경험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이 운영하는 업체는 매출실적과 지방소득세 등 사업 관련 실적도 없는 등 그동안 사업체를 운영한 흔적조차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을 노린 사실상 ‘유령업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강진군 등 행정기관에서는 이들 업체에 대해 단 한 건의 개선명령 처분조차 내리지 않았다. 지난 2012년에는 이들 업체들이 은행권에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로부터 대출 승인까지 받아주기도 했다.

강진군은 또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비율에 해당하는 부가세 환급금을 사업비 정산시 미리 공제하지 않아 2억26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농공단지가 비슷한 상황”이라며 “2013~2014년 업체마다 근거당을 설정해놓고, 보조금도 회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 칠량면 송소리 일대에 101억원을 들여 조성한 칠량농공단지는 14만8924㎡(4만5050평) 규모로, 산업용지는 10만6131㎡(3만2000평)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강진칠량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공장들이 경매 처분된 뒤 텅 빈 채 방치돼 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2명 구속·59명 입건

전남경찰청, 25건 적발

전남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25건을 적발, 2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43명보다 41.8% 늘었으며, 이들이 횡령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17억50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농수축산 사업 보조금 횡령이 82%(50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업일자리 8%(5명), 보건복지 7%(4명), 문화체육관광 보조금 3%(2명) 순이었다.

경찰은 지난 2월 강진에서 농어촌소득 증대사업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군청에 제출, 보조금 5억9000만원을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6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흥에서도 특정작물 재배사업을 한다며 보조금 8000여만원을 받은 후 사업을 하지 않고 나눠 가진 2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자체 등과 공조해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은 물론 특혜 제공, 담당 공무원 비리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선 배인수 광주 서창농협조합장 5번 판결끝 직위상실 불명에 낙마

대법원, 벌금 100만원 확정 빠르면 24일 새 조합장 선거

1심 벌금 100만원→2심 항소 기각(벌금 100만원)→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광주지법 합의부(파기환송심) 항소 기각(벌금 100만원)→대법원 상고 기각(벌금 100만원 확정).

5선의 배인수(60)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이 5번의 판결 끝에 결국 직위를 상실했다. 배 조합장이 불명에 낙마하면서 서창농협은 이르면 24일 새 조합장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조합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직위 상실형인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배씨는 서창농협 이사 선거를 나흘 앞둔 지난 2014년 1월24일 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집을 찾아가 “이번에 쉬고 다음에 한번 하면 어떻겠냐”며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

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도 1심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사뭇 달랐다.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는 “후보자를 사퇴하게 한다면서 10만원에 불과한 돈을 제공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재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당시 배씨의 변호인은 대법관 출신인 김형식 전 국무총리가 맡아 주먹을 받았다.

그러나 광주지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대법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배씨의 범행 사실을 뒷받침할 새로운 진술이 확보됐다는 이유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검찰 측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후보자에게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것은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배씨는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 재상고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에 위상이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그대로 확정, 배씨는 조합장직을 잃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교육청, 통학버스 전수 조사 나선다

광주경찰, 유치원 과실 추가 조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광주일보 8월1일자 6면)와 관련, 경찰이 유치원의 과실을 추가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통학버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 박재성 교육국장은 1일 “학부모와 시민에게 죄송하다”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유치원, 원장, 교사 등에 대해 행·재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운행 종료 후에는 차 안을 맨 뒷좌석까지 확인, 어린이 혼자 통학버스에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

교육청은 유·초·특수학교 운영자 및 통학버스 운전자 540명을 대상으로 통

학버스 운영 매뉴얼 및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치원 인솔교사 정모(여·28)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 원장 박모(여·52)씨를 입건한데 이어 1일 주임교사 이모(여·34)씨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유치원은 전체 방학(8월 1~3일)에 앞서 7월 27~29일까지 종일반만 운영하는 임시 방학에 들어갔고 이 기간 A군 등 60여명의 돌봄교실 참가 신청을 받았다. 첫날은 대부분 등원했고 점점 참가자가 줄어 셋째 날에는 30여명만 참가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3일 모두 정확한 출석 확인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유치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학부모 동의를 구해 버스에 함께 탔던 8명의 원생의 진술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영기자 dok2000@

‘강운태 산악회’ 적극 가담자 최대 50배 과태료 폭탄

광주 남구선관위, 18명에 30만원~397만원 부과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결성한 산악회에 참가한 남구 주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한 주민에게는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397만원이 부과됐다.

광주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 과정에서 사조직(산악회)을 결성한 혐의

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강 전 시장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남구 주민 A씨 등 18명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접대받은 22명의 명단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아 이 중 18명은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30만~39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사 취지를 자세히 모르고 참석한 단순가담자는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강 전 시장이 주최한 산악회 야유회 행사 14차례 중 5차례에 참석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접대비용의 50배에 해당하는 397만4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1~2차례 참석한 B씨 등은 30만원의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았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받은 날로부터 3일동안 사실 여부를 소명할 수 있고, 아무런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부과금액이

확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사전집이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산악회 고문 이모씨는 징역 1년, 사무국장 양모씨와 재무국장 구모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산악회장 김모씨와 나머지 6명은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단속 피하려 차 번호판 가리고 도로변 양제 영업 무더기 적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고 도로변에서 영업을 해온 상습 양제 노점상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

○...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43)씨 등 30명의 노점상은 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인근 노상에서 트럭이나 승합차를 불법주차한 뒤 차량 번호

판을 가리고 영업한 혐의.

○...이들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4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쓰레기봉투로 가리기, 화물적재함 내리기, 종이붙이기, 과일상자로 가리기 등 각종 편법 백태를 일삼았는데, 경찰은 “이씨 등은 약식재판에 회부돼 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고 전과기록도 남을 것”이라고 설명.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토지, 6000평

투자 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의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33억원 / 매매 - 27억 (일시불 조정가)
- 계획관리지역 / 개발호재 많음
- 단기투자 최고지역!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소유자 H. 010-3627-8282